5·18 정신적 손배 청구 가능…일괄 배상 개정안 만들어야

헌재 '청구권 제한 5·18보상법 위헌' 결정에 피해자 5708명 근거 마련
2018년 5명이 첫 청구…개별 소송 땐 3심까지 지리한 소송전 불가피
고령 피해자 많아 신속 처리하고 재판부별 손해배상액 차이 방지 필요

헌법재판소가 5·18민주화운동 피해자가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제한한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관련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피해자·가족들 입장에서는 국가의 불법 행위로 피해를 입은 것도 모자라 배상을 받기까지 사실상 3심까지 가는 지리한 소송전을 감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점을 감안, 관련 소송과 국가 배상 규모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소송 낭비와 피해자 가족들의 심적 부담 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5·18 민주화운동' 피해를 일괄 배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0일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 등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5·18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들은 5708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5·18보상법)에 따라 지난 1990년부터 2015년까지 7차례 보상 심사를 통해 보상금을 받은 피해자들로, 이들에게 지급된 보상금액은 2510억 9700만원이다. 한명당 4400만원이 안된다.

유형별로는 5·18당시 사망 161명, 부상 후 사망 113명, 행방불명 78명, 부상 2504명, 연행·구금과정에서 부상 1217명, 연행·구금 1610명, 기타 62명, 재분류 62명 등이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이들의 국가를 상대로하는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5·18민주화운동 당시 구속당해 부상을 입은 5명이 지난 2018년 12월 처음으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만큼 이들 재판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당시 소송을 제기하면서 광주지법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했었다.

5·18 보상법(16조 2항)은 5·18 피해자가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하면, 민사소송법에 따라 '재판상 화해'가 이뤄진 것으로 규정한다. 재판상 화해는 판결이 확정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어 피해자는 더 이상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데 이들은 보상금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었다.

광주지법은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2019년 5월,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었다.

광주지법은 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 피해자측 변호사를 통해 재판 재개를 위한 기일지정을 신청토록 요청했다.

변호인측은 6월 중으로 기일을 정해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구상이다.

추가 소송도 준비중이다. 이미 80여명의 피해자들이 변호사들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현재 진행중인 손해배상 사건을 비롯, 모든 소송을 피해자·가족들이 배상을 받아내기까지 2년 가까이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 소송을 전담하는 고검이 '국가계약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항소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피해자 가족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3심까지 가는 지리한 소송전을 버텨내야 하는 셈이다.

오월 단체 안팎에서는 이같은 점을 들어, 최근 공동 성명을 내고 "국회는 신속한 후속 입법을 통해 위헌조항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5·18민주유공자들의 아픔을 치유해주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산재 사망사고 사업주 이례적 실형

폐목재 가공업체 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징역 1년 법정구속

일상적 산재 관대한 잣대는 여전

폐목재 가공업체에서 일하다 파쇄 설비에 끼어 숨진 20대 노동자 사망 사고 〈광주일보 3월 15일 6면〉와 관련, 해당 사업주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에서 지난해 5월 폐목재 가공업체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후 지난 3월까지 이뤄진 23건의 모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가운데 1년 이상 형을 선고한 경우로는 이번이 유일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해 징역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었다.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광주시 광산구 하남산단 내 폐목재 가공업체에서 직원 B(27)씨가 파쇄 설비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업체 대표로 충분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해당 업체에서는 지난 2014년에도 비슷한 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했었다.

재판부는 위험한 공정에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험한 작업에 계속배치한 점, 과거 사망 사고가 있었는데도 제대로 된 후속 조처를 하지 않은 점,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반영했다. 반면, 여론의 주목을 받지 못한 '일상적' 산재 피해에는 '관대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오연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업무상과실치상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주 C(52)씨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씨가 운영하는 업체에는 벌금 700만원을 부과했다.

C씨는 지난 2018년 3월, 광주시 광산구 자신의 제조업체에서 프레스로 철판 절단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안전덮개를 설치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노동자 D(21)씨가 작업 중 손가락 5개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노동계 일각에서는 모든 사업주가 의무가입 대상인 산재보험에 가입한 점, 안전관리 주체인 기업이 피해자 치료비(655만원)를 지급한 게 형량을 깎아주는 감형 요인에 포함됐다는 점에서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권오산 광주·전남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부장은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가하면, 합의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공탁했는데 반성했다며 감형 요인에 반영했다"면서 "유족과 검찰측에 항소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공동체의 혼을 깨우다 29일 오후 광주시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세계 지성이 광주를 말하다' 행사에서 최보결 안무가와 시민커뮤니티댄스팀 및 오월 어머니들이 '공동체의 혼을 깨우다'라는 주제로 대동의 춤을 선보이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신장이식 수술 후 환자 사망…조선대 손배 책임

1억4300만원 지급 판결

신장 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에 대한 복부 CT 검사를 실시한 뒤 수술을 지연하는가 하면, 신장이식 환자들에게 발생하는 심각한 감염인 털곰팡이균 감염에 대한 진단·치료를 지연한 학교법인 조선대측은 유족들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민사 3부(부장판사 이창한)는 수술 뒤 치료 중 숨진 환자의 부인 A씨 등 가족들이 조선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선대는 A씨 등 유족들에게 1억4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A씨 남편은 당뇨병성 신장병 진단을 받고 투석을 해오다 지난 2015년 9월 27일 조선대병원에서 신장이식 수술을 받았다. 환자는 수술 뒤 일반 병실로 옮겨진 이후 복부 통증을 호소, 10월 16일 복부 CT 검사를 통해 '허혈성 대장염'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병원측은 보존적 치료를 하다 상태가 악화되자 같은해 10월 22일 응급 수술을 실시했고 28일 조직검사를 거쳐 환자의 털곰팡이균 감염 사실을 확인, 치료제를 투여했지만 환자는 11월 6일 숨졌다.

유가족들은 병원측의 수술 및 진단·치료 지연 등으로 환자가 숨졌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A씨 등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법원은 병원측 책임이 있다고 했다. 법원은 '병원 의료진이 허혈성 대장염으로 진단한 뒤 곧바로 수술을 해야 함에도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 '환자의 털곰팡이균 감염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지연한 잘못도 있다'고 봤다.

환자에 대한 수술이 늦춰지지 않고 시행돼 조직검사가 이뤄졌다면 검사 기간 등을 고려할 경우 조기에 털곰팡이균 감염 사실을 확인하고 치료제 투여가 가능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다만, 재판부는 병원측 책임 비율을 40%로 제한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공직 신분 활용 금전적 이득 광주시장 운전기사 입건

이용섭 광주시장의 전 운전기사가 공직자 신분을 활용해 금전적 이득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입건됐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향후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 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0일 광주시와 서부경찰 등에 따르면 전 운전기사 A씨는 이용섭 시장이 시장으로 당선된 이후 편의 제공을 대가로 제 3자로부터 고급승용차를 제공받아 타고 다닌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A씨를 불러 조사를 진행했으며 금품을 제공받은 대가로 편의가 제공됐는지 자료를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A씨 외에 다른 공직자들이 연루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는 데 따라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최근 일신상의 이유로 광주시에 사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사실 공표 문제로 수사중인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황주홍 전 의원 항소심 검찰,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주홍(69)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7일 광주고법 형사 1부 심리로 진행된 황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황 전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선거구민들에게 33차례에 걸쳐 7700여만원을 제공하고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십차례 식사나 부의금 등을 전달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 전 의원은 제21대 총선에서 민생당 후보로 전남 강진·장흥·보성·고흥 선거구에 출마해 낙선했다. 황 전 의원 선고는 오는 7월 8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5계>

※QR코드: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사건번호	매각물건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아파트]					
2020타경 55798	1	목포시 청호로209, 102동 7층 702호 102동 702호 [산정동,신안비치아파트] 59.31㎡	아파트	74,000,000 74,000,000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020타경 6253	1	목포시 상동 127-3 335㎡	대	789,354,350 789,354,35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목록2현황"다가구주택[1~4층]"
		목포시 영산로 503-1 1~3층각167.28㎡ 4층 128.67㎡ 지하실49.17㎡[현황66.6㎡] 제시외 창고 20.7㎡	여관		
2020타경 6734	1	목포시 산정동 23-40 366㎡	대	103,868,770 103,868,77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
		동소23-40 90.91㎡ 제시외 주방 등 37.2㎡	단독주택		
[연립주택/다세대/빌라]					
2020타경 55149	1	목포시 마인계터로6번길1, 3층 301호 [죽교동,유창탑빌라] 37.35㎡	다세대	26,000,000 26,000,000	현황공동주택[빌라]임
[대지/임야/전답]					
2020타경 5779	1	무안군 해제면 신정리 17 1229㎡[공유자윤순중,윤혜선,윤혜숙,윤혜란,윤혜영,윤유중,윤운자지분각699/301105전부,공유자윤현준,윤태호,김창모,김미영,김미선,최양선,최민주,최진석,조계원,조계환,이동현,이종천,윤창호,장소영,장민구,장서연지분각466/43015전부,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제한.매각제외제시외건물있음]	전	8,621,000 8,621,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원상회복명령가능성있음].지상소재수목[동백나무등],조경석매각제외.일부도시계획시설[도로]에저촉,일부현황도로
2020타경 6215	3	무안군 일로읍 망월리 1029 3560.5㎡	답	299,082,000 299,082,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20타경 6215	4	동소 1032 3232.6㎡	답	265,073,200 265,073,2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20타경 6888	1	신안군 압해읍 송공리 96 697㎡[현황휴경중인묵답임]	답	71,094,000 71,094,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20타경 55675	1	영암군 삼호읍 서창리 189 3405㎡[토지일부를도로로이용중]	답	88,530,000 88,530,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20타경 55736	1	무안군 청계면 남안리 307-5 464㎡	답	22,384,000 22,384,000	일괄매각.농지취득자격증명요.목록2일부접도구역
		동소 311-1 728㎡[물건번호1:현황각휴경지,휴경지및도로[비포장농로]임]	전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2020타경 55057	1	무안군 삼향읍 남악3로82번가길49, 6층 609호 [뉴캐슬하이클래스] 84.22㎡	근린시설	205,000,000 205,000,000	
	2	무안군 삼향읍 남악3로82번가길49, 8층 802호 [뉴캐슬하이클래스] 82.58㎡	근린시설	203,000,000 203,000,000	
[기타]					
2020타경 6291	2	무안군 현경면 동산리 176-43 432㎡	잡종지	688,551,200 688,551,200	일괄매각[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제6조기계기구목록포함],제시외건물포함,목록2~4는일단으로공업용건부지로이용중,목록2~4의부속토지로이용중
		동소 183 1185㎡	잡종지		
		동소 184-8 1353㎡	잡종지		
		동소 184-16 860㎡[농지취득자격증명요[원상회복명령가능성있음],접도구역일부저촉]	전		
		동소184-8 1440㎡ 제시외 사무실 등 27.6㎡,기계기구목록참조[공장및분뇨처리시설이었으나현재공실.기계기구목록2번[톱밥제조설비[함머분쇄]]소재불명으로평가제외]	분뇨.쓰레기처리시설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법형질 변경으로 인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수 있음.

② 공유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액을 공유자우선 매수신고액으로 본다.

2. 매각기일 : 2021. 6. 14.[월]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21. 6. 21.[월] 14: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01호 경매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법원공고 → 법원경매정보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21. 5.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사법보좌관 공정배